

‘安-尹 회동’ 정권교체 한뜻… 제3지대 가능성엔 거리두기

(안철수 대표-윤석열 전 총장)

“확실한 정권교체” 한 목소리
제3지대 협력 해석엔 경계
“선의의 경쟁자·협력자 확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찬 회동을 갖고 ‘이념, 진영을 넘어 확실한 정권교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른바 ‘반문연대’(반 문재인 연대)로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가 한 목소리를 낸 셈이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약 110분간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다. 비공개에 앞서 두 사람은 윤 전 총장의 최근 탈원전 비판 행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형 원전 프로젝트인데, 연구비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라며 “제가 만든 재단에서 연구비를 대주고 있다”고 말을 건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두 야권 대선 주자는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는 확실한 정권교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뉴스시

이에 윤 전 총장은 “SMR(소형원자로 모듈)이 민간으로 전용이 잘 되면 국민들이 볼 때도 더 안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회동에서 두 사람은 ‘정권 교체 필요성’과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눴다. 윤 전 총장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확실한 정권 교체 필요성과 상호 협력,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서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서로 나눌 것”이라고 회동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반문연대 중심의 ‘제3지대’ 협력 가능성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확정하지 않았고, 안 대표도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제3지대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에 선 그은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오찬 회동에 따라 두 사람이 이른바 ‘밀당 전선’을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각자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안대표는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고 저 또한 대원칙에 입각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 측 관계자도 이번 만남에 대해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한 자리”라고 전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아홉 개가 달라도 하나라도 같

으면 같이 할 수 있다”며 “안대표는 방향성에 있어 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쏠리는 걸 막는 측면, 중도 진영을 잡기 위해 윤 전 총장이 바깥에 있고 안철수와 제3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정권교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만남에 대해 해석했다.

다만 신윤명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안대표가 ‘중도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자신의 중도 이미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나려는 것”이라며 “안대표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 같은 유력 대선 주자가 자기를 만난다는 사실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韓-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첨단산업 협력 확대

그린 뉴딜, 기후변화 공감
에너지 전환 필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7일 ‘반도체’, ‘수소’,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화상 형태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자 관계 발전 방안 ▲실질 협력 ▲한반도 등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네덜란드가 가진 ‘반도체 생산장비’ 분야 강점 등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 기술 강국인 한국과 네덜란드가 혁신을 위한 최선의 파트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간 수소, 미래차 등 4차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루터 총리는 문 대통령 제안에 동의한 뒤 “양국이 첨단 기술을 농업, 도시 개발, 해운에 접목하는 데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교역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된 점에 대해 평가한 뒤, 추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그린 뉴딜’, ‘기후변화’가 양국 주요 관심사라는 데 공감한 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어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루터 총리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축하했다. 이어 P4G 회의가 오는 11월 영국

에서 열릴 COP26(제26차 UN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20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지난 1961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60년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이어 지난 2016년 9월 수립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산업 분야 등 실질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도 넓혀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세계보건기구(WHO), 코백스(COVAX-AMC) 등 다자협력을 통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영훈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與, 바이오·미래차 등 지원 ‘핵심전략산업특별법’ 추진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정부 컨트론타워 신설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을 당론 형태로 추진한다. 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는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정부 컨트론타워 신설, 국가전략산업단지 개념 도입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반도체기술특위)는 7일 송영길 대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추진 계획에 대해 마련했다.

반도체기술특위에서 마련한 특별법은 기존 민주당이 추진한 ‘반도체 특별법’의 지원 대상 확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부처별 담당 업무를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 총괄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차원에서 산업융수·전력·도로 등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단지 조성 개념도 이번 특별법에 포함됐다.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기존) ‘반도체 특별법’으로 하면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핵심전략산업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할 국가핵심전략산업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특별법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 및 고용 등(국가핵심전략산업이) 국민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만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 ‘산업’보다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WTO 관련 규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기술특위는 특별법에 따른 R&D 예산과 세계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백운규 영장 회유 논란에 靑 “여력 없어”

박수현 수석 “코로나·민생 생각 뿐”

청와대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다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문제에 관심이 쓸 여력이 없다”고 7일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사진)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의혹 보도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월에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청와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의중을 반영해 주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는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기획할 것’이라는 만능 믿음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경험을 통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해당 보도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어 “청와대는 지금 오로지 ‘코로나’, ‘민생’ 문제밖에 생각할 겨를이 없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많은 정치의 계절이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을 정치로 자꾸 끌고 가려는 시도를 할 텐데, 저

희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수석은 해당 보도와 관련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발언하고 후속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다”며 윤 전 총장이 지난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처리 당시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와 관련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전제조건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박 수석은 “저희가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기왕에(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가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